

“램지어는 일본의 대변인”...미 시민사회도 분노

하버드대 법대 학생회 온라인 세미나 열고 일제히 비난 쏟아내 혼다 전 의원 “하버드, 전범기업 미쓰비시로부터 후원 끊으라” 싱 전 판사 “일본의 역사 말살·세탁하는 일 돕고 있다” 맹비난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하는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향해 위안부 문제에 전착하는 미국의 시민운동가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로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 일본이 침략한 모든 나라가 관여된 문제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인권, 여성의 시민권, 저항의 역사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원격으로 참석한 16일(현지시간)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다.

특히 위안부를 매춘부와 매춘업자 사이의 자발적 계약으로 이해한 램지어 교수를 향해 “계약 문제의 관점에서 이 현안을 규정하지 말라”면서 “여

“위안부 지킴이”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의원은 세미나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교수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고 하버드대가 미쓰비시로부터 더 돈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램지어 교수가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는 석좌교수직으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겨냥한 발언이다.

혼다 전 의원은 “그가 일본법의 전문가라면 그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일본 역사에 관해 그는 문외한이다. 뭔가를 하라고 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7년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전 의원은 과거 공화당이 하원 외교위를 주도할 때 일본 정부의 영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며 일본 측을 비난했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릴리언 싱 위안부정의연대(CWJC) 공동의장도 “100% 동의한다”면서 램지어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일본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2007년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전 의원은 과거 공화당이 하원 외교위를 주도할 때 일본 정부의 영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며 일본 측을 비난했다.

싱 의원은 “그들은 편파적이고 일본의 수정주의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역사를 말살한 뒤 다시 새롭게 쓰고 세탁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7년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전 의원은 과거 공화당이 하원 외교위를 주도할 때 일본 정부의 영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며 일본 측을 비난했다.

그는 “램지어는 뻔뻔하게도 위안부 이슈에 관한 글을 쓰면서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인터뷰하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램지어가 오늘 행사를 시청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는 동정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전 의원은 과거 공화당이 하원 외교위를 주도할 때 일본 정부의 영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며 일본 측을 비난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는 위안부 문제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라는 기본적인 관점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2007년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전 의원은 과거 공화당이 하원 외교위를 주도할 때 일본 정부의 영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며 일본 측을 비난했다.

성 권리, 인권, 국가 간 분쟁, 그리고 전시에 벌어지는 여성 착취의 문제로 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입에 참여한 트럼프 지지자들과 다르지 않다”고도 비유했다.

혼다 전 의원도 위안부 문제를 “한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인신매매에 대한 이슈”라고 정의했다.

싱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줄리 탕 CWJC 공동의장은 “일본의 로비는 매우 매우 강력하다. 수백만달러를 갖고 있으며 정부와 비정부 단체들까지 동원된다”라고 우려했다.

2007년 위안부 관련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혼다 전 의원은 과거 공화당이 하원 외교위를 주도할 때 일본 정부의 영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며 일본 측을 비난했다.

탕 의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모든 위안부와 참전군인들에게 매우 매우 나쁜 합의였다”며 “할머니들의 끔찍한 고통을 나라 사이의 외교적 술책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코로나 접종소 대기 차량 행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캠퍼스에 설치된 연방정부 운영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16일(현지시간) 주민들이 타고 온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주들 빨리 안고 싶어 미국 90세 할머니 10km 눈길 뚫고 백신 접종

추위와 폭설을 이기는 ‘고난의 행군’으로 백신을 접종한 90세 노인의 사연이 주목을 받는다. 주인공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 할머니 프랜 골드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골드먼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종아리까지 눈이 쌓인 왕복 6마일(약 9.7km) 길을 걸어 시애틀아동병원에서 백신 접종에 성공했다. 그 과정은 개인적으로 ‘대작전’이었다. 골드먼은 여행 연습을 통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부터 확인했다. 그는 예약일 하루 전 휴대전화기를 갈라잡아 삼야 불편한 허리를 지탱할 지팡이를 짚고 목적지를 향해 떠났다.

간호사가 주사를 쉽게 놓을 수 있도록 반발 티셔츠를 입었다. 그 위에 양털 상의, 다운점퍼, 레인 코트를 입고 양털 바지, 스노부츠, 두 손에 쥔 지팡이 2개로 무장을 마쳤다. 14일 오전 8시에 출발한 골드먼은 길이 얼어붙은 데다가 눈까지 쌓여 예약 시간에 6분 늦었으나 접종을 무사히 마쳤다.

골드먼은 “손주들을 다시 안고 싶어 참을 수 없다”며 “그냥 좀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연합뉴스

‘도둑 소굴’ 된 美 소도시 시장·서장·공무원 함께 횡령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행정 수반인 시장과 이를 감시하는 경찰서장,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공금을 횡령했다가 무더기로 기소됐다.

16일(현지시간) ABC뉴스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에밋 카운티 암스트롱시의 시장과 경찰서장과 전·현직 시청 직원들이 기금을 횡령한 일이 발각됐다. 에밋 카운티 경찰은 지난 4년에 걸친 수사 끝에 그레그 범 시장과 크레이그 메릴 경찰서장, 전직 시청 직원 코니 새커리, 현직 시청 직원 트레이시 레이 저지른 범죄 정황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금을 유용했으며, 공문서를 조작하고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횡령을 숨기려 했다. 아이오와주 회계감사관이 2017년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들이 거둬놓고 제출하지 않은 공과금이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은 10만달러(1억1000만원)에 달한다. 또 이들은 민간인에게 테이저건을 쏘 현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NYT에 따르면 암스트롱시의 인구는 840명이다.

경찰은 수사 대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이 기소된 피고인 4명 외에 추가로 용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범 시장과 메릴 서장, 새커리는 B급 중범죄 혐의로, 레이는 C급 중범죄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연합뉴스

‘낙인찍기’ 비판 속 프랑스 하원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 통과 찬성 347명, 반대 151명, 기권 65명 가결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를 근절하겠다고 마련한 ‘공화국 원칙 강화 법안’이 입법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집이나 종교시설·단체에서 3세 이상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 방식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예배 시설로 등록해 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쓰는 활동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모스크가 1만유로(1340만원) 이상 기부받으면 관계 당국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하원은 16일(현지시간) 찬성 347명, 반대 151명, 기권 65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고 AFP, AP 통신이 전했다. 총 51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에는 ‘이슬람교도’, ‘이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슬람교의 교육 방식부터 종교 시설 운영 방법까지 다양한 삶의 방식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의사에게는 혼전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녀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일부다처제와 강제 결혼을 단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누군가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고도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는 지난해 발생한 교사 참수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주며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는 작년 10월 일면식도 없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이슬람교도에게 낙인을 찍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학부모가 사실관계가 틀린 딸의 이야기만 듣고 온라인에 파티를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고, 테러범은 이 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이 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경쟁자로 나선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를 견제하고 극우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제랄드 다르마냥 내무부 장관은 투표에 앞서 RTL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엄격하지만, 공화국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